

북·중경협 의 현황과 전망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경제 밀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경협 포함)에서 한국의 비중은 31%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7%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자원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확인된 투자계획만 살펴보더라도, 자원 분야에 4.6억 달러, 교통망 연결에 23.7억 달러, 특구개발에 35억 달러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북·중 경제 밀착을 경제적 종속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중국이 대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물류, 자원,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세간의 우려와 달리 북한 역시 중국 종속형 발전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북·중 경제 밀착은 핵문제 등 현안의 해결이나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긍정적 효과 역시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바라보는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관계의 긴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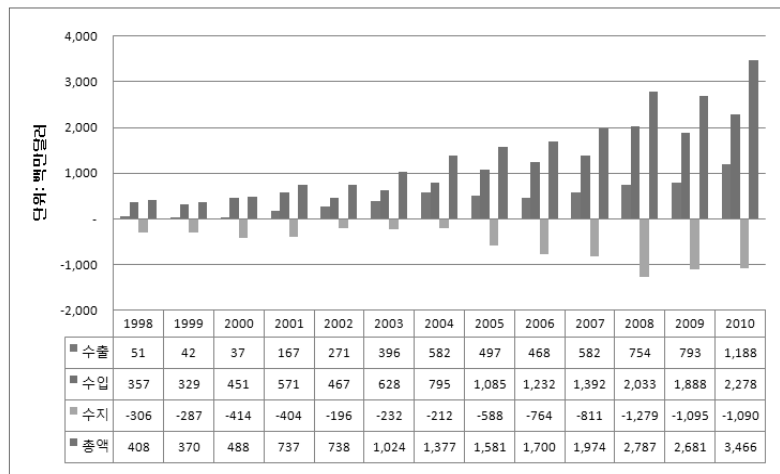
1. 북·중경협 현황
 - 가. 무역
 - 나. 투자
2.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 전략과 북한의 대북방 전략
 - 가.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전략
 - 나. 북한의 신(新) 북방전략
3. 시사점

1. 북·중경협 현황

가. 무역¹⁾

-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중반부터 북·중 무역 규모가 급성장하여, 201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돌파함 (34.7억 달러).
 - 2010년 상반기 무역액이 12.9억 달러였는데, 2011년 동기 무역액은 25억 달러로 2배 증가. 올해 전체로는 50억~70억 달러 전망.
-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은 수입이 주도하고 있어, 무역 적자폭이 급속히 확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100억 달러에 달하며, 특히 2008년부터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 2011년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이 200% 급증(3.5억 달러 → 10.6억 달러)한 반면, 수입은 54% 증가(9.4억 달러 → 14.5억 달러)에 그쳐 적자폭이 다소 감소(5.9억 달러 → 3.9억 달러).
 - 석탄을 포함한 광물의 대중국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북·중교역의 수지 변화가 주목.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



-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빠르게 증가함에도 경화가 부족한 북한이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은 미스터리. 이와 관련하여 2가지 가설이 가능함.

- 첫째, 북·중교역의 상당 부분이 구상무역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구상무역도 당시 시세나 협정가격에 따라 세관에 기록되므로 외부에서 볼 때는 경화 결제로 착각. 현재 북·중 변경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업체는 수출대금의 80%만 경화로, 20%는 현물로 결제를 받고 있음.
 - 둘째, 남·북경협이나 기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상적 교역에서 벌어들이는 경화가 대중국 수입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
- 2010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품은 무연탄(4억 달러) → 광물(2.5억 달러) → 의류제품(1.9억 달러) → 철강(1.6억 달러) → 수산물(0.7억 달러) 순서이고, 수입품은 원유 등 연료(4.8억 달러) → 기계류(2.5억 달러) → 전기기기(1.9억 달러) → 차량(1.6억 달러) → 플라스틱제품(0.84억 달러) 순서임.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출에서 수산물, 목재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무연탄·광물·철강 등의 비중이 급증.
 - 의류제품은 북한의 값싼 인건비를 활용한 임가공품이 대부분. 중국 인건비가 상승하면서(현재 북한의 2배 수준) 임가공이 증가해왔는데, 2010년 '5.24조치'로 남·북 간 의류 임가공이 중단된 이후 더 빠르게 증가.
- 2010년 남·북경협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60.9억 달러인데, 이 중 중국이 57%, 한국이 31%를 차지함.
- 2007년~2010년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42.7% → 57%로 커진 반면, 한국의 비중은 38.9% → 31%로 감소하는 추세. 남·북관계에서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북한 대외무역이 일국에 50% 이상 의존한 것은 1990년 소련 이후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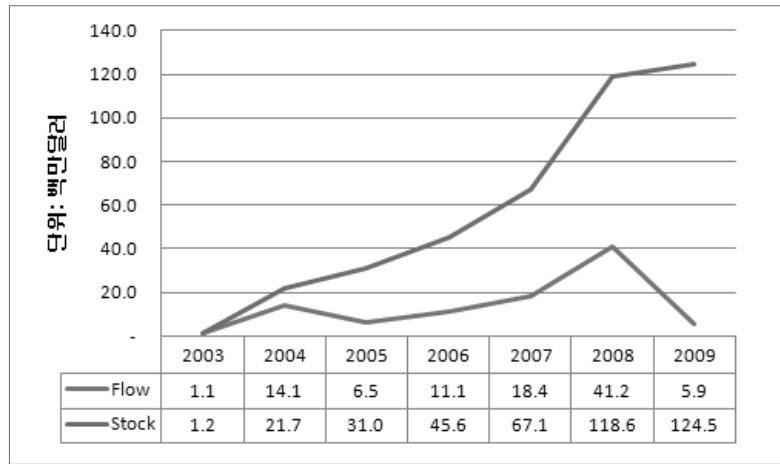
2010년 남북경협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60.9억 달러인데, 이 중 중국이 57%, 한국이 31%를 차지... 2007년~2010년 북한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42.7% → 57%로 커진 반면, 한국의 비중은 38.9% → 31%로 감소하는 추세. 남북관계에서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

나. 투자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도 급증하는 추세. 투자 실행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110만 달러에서 2008년 4,100만 달러로 40배가량 증가. 2009년은 핵심협 여파로 586만 달러를 기록함.²⁾
- 2003년~2009년 중국의 순수적투자액은 1.25억 달러.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 투자금액의 70%가 자원개발 및 관련 인프라 건설부문에 투입... 외국자본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이 중국 측의 투자이며, 그 중에서 금액이 확인된 12건의 투자계약금액만도 5,390억 원(약 4.6억 달러)에 달해

〈그림 2〉 중국의 대북투자 실행액 추이



- 실제 투자 실행액은 공식통계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예컨대 공식통계상 2003년까지 중국의 대북 순수적투자액은 120만 달러이나, 1993년~2003년까지 나진선봉특구 투자금액만도 4,500만 달러에 달함.³⁾
- 투자 계약액은 실행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예컨대 2004년~2008년 중국의 대북 직접 투자 실행액은 9,100만 달러이지만, 동 기간 광물자원 개발 분야 투자 계약액 중 확인된 것만도 약 4.6억 달러에 달함.⁴⁾
 - 향후 북한이 핵문제나 개혁·개방문제에서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의 대북투자 실행액이 폭증할 수 있음을 의미.
 - 중국정부는 대북투자의 본격적 실행을 핵문제나 개혁·개방문제에서 북한의 태도변화와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
-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 투자금액의 70%가 자원개발 및 관련 인프라 건설부문에 투입되었음.
 - 외국자본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이 중국 측의 투자이며, 그 중에서 금액이 확인된 12건의 투자 계약금액만도 5,390억 원(약 4.6억 달러)에 달함.
- 중국은 대(對)북한 연계 개발전략에 따라 랴오닝성(遼寧省) ‘연해경제벨트’와 신의주 일대, 지린성(吉林省)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나진선봉특구를 연계개발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함.

〈표 1〉 2004년~2008년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개발 및 채굴권 확보 현황

지역	광산	체결시기	종류	투자금액
함경북도	은성군 강안탄광	2005. 7	갈탄	
	회령시 오룡광산	2006. 5	철	543억 원 (3.16억 위안)
	무산군 무산광산	2006. 11	철	172억 원 (1억 위안)
함경남도	덕성군 덕성광산	2004. 3	철	1,165억 원 (1억 달러)
	장진군 장진광산	2004. 5	몰리브덴	20억 원 (240만 유로)
	허천군 상농광산	2004. 8	금, 동	
양강도	보천군 보천탄광	2006. 9	금	344억 원 (2,000만 위안)
	혜산시 혜산청년광산	2008. 11	동	756억 원 (4,400만 위안)
	갑산군 8월광산	2006. 9	동	17억 원 (1,000만 위안)
	갑산군 문락평광산	2006. 4	철	172억 원 (1억 위안)
평안북도	의주군 덕현광산	2007. 3	철	1,032억 원 (6억 위안)
	구장군 룡등탄광	2005. 10	무연탄	
	구장군 룡문탄광	2005. 10	무연탄	
	의주군 덕현탄광	2007. 3	철	
	신천군 신천탄광	2006. 4	금, 은	
평안남도	순천시 2.8직동청년탄광	2005. 4	무연탄	
	은산군 천성청년탄광	2005. 4	무연탄	
	성천군 룡흥탄광	2007. 9	몰리브덴	51억 원 (443만 달러)
황해남도	웅진군 웅진광산	2008. 6	철	516억 원 (3,000만 유로)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광산	2006. 3	연, 아연	602억 원 (3.5억 위안)
	수안군 수안광산	2007. 1	금	
계				5,390억 원 (4.6억 달러)

2005년 6월 중국 국무원은 동북 3성 개발의 본격화를 선언한 '36호 문건'을 통해 대북 도로·항만·구역(특구) 연계개발 의사를 공식 표명... 랴오닝성(遼寧省)은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에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계획을, 지린성(吉林省)은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에 훈춘-나진선봉 연계개발 계획을 포함

2.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전략과 북한의 대북방 전략

가.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전략

- 2005년 6월 중국 국무원은 동북 3성 개발의 본격화를 선언한 '36호 문건'을 통해 대(對)북 도로·항만·구역(특구) 연계개발 의사를 공식 표명함.
- 랴오닝성(遼寧省)은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에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2009년 중국 국무원이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 (7월 1일) 및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8월 30일)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함에 따라, 관련 대북 연계개발 사업들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 즉 지방정부와 개별기업에 맡겨뒀던 과거와 달리 2010년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자는 중앙정부에 의해 추동

발계획을, 지린성(吉林省)은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에 훈춘-나진 선봉 연계개발계획을 포함.

- 2009년 중국 국무원이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7월 1일) 및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8월 30일)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함에 따라, 관련 대북 연계개발 사업들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 즉, 지방정부와 개별기업에 맡겨뒀던 과거와 달리 2010년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자는 중앙정부에 의해 추동.

<그림 3> ‘연해경제벨트’와 ‘창지투’



<그림 4> 신(新) 압록강대교 · 위화도 · 황금평



- 랴오닝성은 단동-신의주 교통물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황금평특구를 개발함.
 - 2010년 12월 단동-신의주간 신(新) 압록강대교(폭 33m, 길이 6km)가 착공됐으며, 소요비용 전액(17억 위안, 약 2,900억 원)은 중국이 부담.
 - 신의주-평양 고속도로 건설도 협의 중이나 아직 대북차관 제공방식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음.
 -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 계획 요강>(2011)

에 따르면, 황금평에 약 500만 평의 특구를 개발하여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육성할 계획(2011.6 착공식). 중국은 황금평을 100년 임차하는 대가로 매년 5억 달러어치 물품을 제공.

- 황금평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1) 황금평-신의주 간 여객·화물 부두를 건설하고 단둥 대동항과 연계, 2) 황금평내 그물망방식 도로망을 신설하고 신(新) 압록강대교 이외에 황금평-단둥 간 2개 출입도로를 신설, 3) 단둥에서 송전선을 연결하여 배전망을 건설하고 인터넷 및 유무선 통신망 건설.
- 위화도는 개발건설의 안전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직 시행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음.⁵⁾

○ 지린성은 태평양 출구 확보를 위해 나진항 사용권을 확보하고 현대화 하는 동시에, 훈춘(중)-취안허(중)-원정(북)-나진항(북)을 잇는 도로를 신설하고 현대화하여 동북 3성과 나진항을 잇는 물류 인프라를 완성. 동시에 라선특구 개발을 본격화함.

-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 계획 요강>(2011)에 따르면, 라선에 원자재공업(원유·화학·야금·건축), 장비공업(조선·자동차), 첨단기술공업(컴퓨터·통신설비제조·가정용전기제품), 경공업(농수산물가공·일용품·피복), 서비스업(창고보관·물류·관광),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육성할 계획(2011.6 착공식).
- <1중추, 3방향, 5통로>의 교통망 구축: 나진-선봉-웅상항을 중추로 중국·러시아(北)와 연결되고 청진(南)과 접하며, 동해(東)로 향하도록 훈춘, 도문, 핫산, 청진과 통하는 육·해상 통로 구축.⁶⁾
- 창지투 선도구 관련 <12개 연계교통망 프로젝트>(2009.12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북·러 교통망 연결·개선을 위해 25.6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며, 그 중 9개 프로젝트(23.7억 달러)가 북한과 관련.⁷⁾
- 중국 국영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와 조선합영위원회가 20억 달러 투자계약 체결(2011.3.29). 라선특구에 화력발전소, 도로, 부두, 석유정제공장, 제철소를 건설하고 여타 지하광물 자원개발에도 투자할 계획(2010년 12월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 간 체결된 라선특구 및 황금평에 대한 35억 달러 규모 투자 양해각서의 일환).⁸⁾

**중국 국영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와
조선합영위원회가
20억 달러 투자계약
체결... 라선특구에
화력발전소, 도로,
부두, 석유정제공장,
제철소를 건설하고
여타 지하광물 자원
개발에도 투자 계획**

〈표 2〉 창지투 선도구 관련 12개 대외통로 프로젝트

중국의 대(對)북한 연계 개발전략에 편승하여 북한은 북방특구를 확대할 조짐... 지린성 창지투 선도구 개발에 편승하여 나진선봉특구 개발을 재개.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하여 경제기술협력협정을 맺은 직후 김정일 위원장이 동(同) 특구를 전격 방문하여 관심을 표명

프로젝트명	총투자금액	건설 기한	비고
팔도-삼합-청진 고속도로 경내구간(47Km)	28억 위안	2015년	북한 관련
훈춘-권하-나진 고속도로 경내구간(39Km)	23억 위안	2015년	
화룡-남평-청진 고속도로 경내구간(50Km)	30억 위안	2015년	
도문-남양-두만강-हत산 철도 합작개조(126Km)	24.3억 위안	2020년	
도문-청진 철도합작개조(청진항사용)(171.1Km)	20억 위안	2020년	
화룡-남평-무산 철도(53.5Km)	16억 위안	2015년	
도문-나진 철도 합작개조(158.8Km)	12.7억 위안	2020년	
룡정, 개산툰 철도통상구 건설(2.5Km)	1.5억 위안	2020년	
권하, 도문, 사타자, 개산툰, 삼합, 남평 통상구 다리 건설(2,152Km)	5억 위안	-	
북한 관련 프로젝트 총투자액 합계	160.5억 위안 (23.7억 달러)		
훈춘 춘화분수령 통상구 건설	2억 위안	2020년	북한 비관련
훈춘 장령자-블라디보스토크 고속도로(14Km)	8억 위안	2015년	
중려 인접지역 교통기초시설합작 (훈춘 철도통상구 확건)	3억 위안	-	
프로젝트 투자액 총계	173.5억 위안 (25.6억 달러)		

나. 북한의 신(新) 북방 전략

- 중국의 대(對)북한 연계 개발전략에 편승하여 북한은 북방특구를 확대할 조짐임.
 - 지린성 창지투 선도구 개발에 편승하여 나진선봉특구 개발을 재개.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하여 경제기술협력협정을 맺은 직후 김정일 위원장이 동(同) 특구를 전격 방문하여 관심을 표명.
 -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특구를 지정하고 2010년까지 45.4억 달러(1995년 기준)를 유치하여 싱가포르 모델을 지향하는 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국제관광기지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핵문제, 동아시아금융위기 등으로 실제 개발은 미미(2003년 말까지 계약기준 9.3억 달러, 집행기준 1.6억 달러 투자유치에 그침).⁹⁾
 - 2007년 현재 외국투자기업 98개, 가공무역기업 36개, 외국상주대표 사무소 14개, 여타 북한기업 80여 개가 조업 중(나선시 인민위원회 채송학 부위원장 설명). 외국투자기업의 80%가 중국계.

- 라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개발에 편승하여 황금평 특구개발에 착수. 장기적으로는 황금평을 시작으로 신의주를 개발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
 - 2002년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의주특구 개발계획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북한은 금강산 및 개성공단 등 대남특구를 중시. 그러나 최근 라오닝성의 대북 연계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남·북관계도 장기간 경색됨에 따라 신의주 인근 특구개발에 다시 관심이 고조.
- 북한이 대풍그룹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여 재건하려고 하는 8대 도시는 평양, 남포, 함흥, 원산, 김책, 청진, 신의주, 나진선봉 등으로 수도인 평양과 인근의 남포를 제외하면 모두 북부지역에 집중됨.
- ‘중국 밀착형 발전전략’으로 선회
- 2000년대 들어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북한은 경제적 생존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의 대북경협·지원에 의존해 왔으나, 어느 한쪽에 경도되기보다는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
 -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고, 2009년부터는 중국의 대북 경제적 관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중국으로의 경제적 밀착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부각.
 - 2010년과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의 세 차례 중국방문은 ‘중국 밀착형 경제전략’으로의 선회를 알리는 신호탄.
- ‘중국 밀착형 경제전략’이 반드시 ‘한국배제’(Korea Passing)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북한은 일방적인 경제적 의존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종속 및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존정도가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 반드시 제3의 대상을 통해 균형을 추구.
 - 냉전시기 중·소분쟁을 틈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한 소위 ‘자주외교’를 수십 년간 전개한 경험.
 - 북한 ‘자주외교’는 대(對)중·소 시계추외교(1960년대~1980년대) → 대(對)한·미·일 남방외교 모색(1990년대) → 대(對)한·중 등거리외교(2000년대)로 변화.
- 북한은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및 한·중관계의 전개양상에 따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나 ‘시계추 외교’를 재연할 전망이다
- 한·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시계추 외교를, 호전되는 경우 등거리 외

2000년대 들어 남·북관계와 북·중 관계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북한은 경제적 생존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의 대북경협·지원에 의존해 왔으나, 어느 한쪽에 경도되기 보다는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

현실적으로도 북방특구는 아직 성공 가능성이 미지수이며, 북방특구에 대한 중국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서방세계와의 협력이 필수적...

북한은 2010년 1월 나진선봉특구법 개정을 통해 그간 막혀 있던 한국기업의 특구 진출을 허용하고, 나진항 및 청진항 불하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 간 경쟁을 조장하는 전략을 구사

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현실적으로도 북방특구는 아직 성공 가능성이 미지수이며, 북방특구에 대한 중국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서방세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 북한은 2010년 1월 나진선봉특구법 개정을 통해 그간 막혀 있던 한국기업의 특구 진출을 허용.
 - 나진항 및 청진항 불하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 간 경쟁을 조장하는 전략을 구사.

〈표 3〉 2010년 나진선봉특구법 개정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통일적 지도’ 조항 삭제(구법 3조) • 주요부문을 제외한 투자승인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10조, 13조) • 예산 편성집행권, 토지건물 임대 양도권을 지방정부로 이관(13조) • 지방정부에 투자유치권한 부여(10조, 13조) • 지방정부의 외환관리권한 확대(33조, 34조, 36조)
인센티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장려부문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39조)
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의 나선특구 진출을 법률적으로 허용(8조) • 특구 내 기업과 특구 밖 북한 기업·단체 간 거래 허용(21조) • 투자형식 확대 및 이에 대한 국가보장 규정 신설(4조) • 물자 반·출입에 대한 통제 완화(16조) • 공단설립 허용(20조) • 북한 인력의 해외연수 허용 조항 신설(16조) • 상품가격 결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축소(25조) • 특구의 관광기능 확대(2조)
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회통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에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는 조항 신설(2조) • 각종 불법적, 비사회주의적 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5조, 14조) • 외국인 출입 및 채용 관련 검증장치 강화(23조, 44조) • 달러 사용 금지를 시사(33조)

- 중국 등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제2의 7.1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음.
 - 2002년~2003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및 <시장합법화조치> 등 개혁조치와 함께 신의주 및 개성을 경제특구로 추가 개방한 경험.

- ‘2012년 경제 강국 건설’을 앞두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개방조치가 나올 가능성. 화폐 개혁 실패 이후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이 숙청되고, 박봉주 전 총리가 복권.
- 중국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과 본격적 대북투자를 연계시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바, 북한도 어느 정도 이에 호응할 필요.
- <나진선봉특구법> 개정(2010.1.27) 역시 개혁·개방의 확대에 초점. 특히 특구 내 외국기업과 특구 밖 북한 기업·단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등 기존 ‘모기장식 개방’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주목.

3. 시사점

- 북·중 경제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 현재 북한 대외무역(남북경협 포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냉전 말 소련이 차지한 비중과 동일하며,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
 - 북·중경협은 남·북경협에 비해 핵문제 등 국제정세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 대북 경제적 관여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관리’에 연계시킨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기본방침.
- 동북 3성과 북한 간 ‘자본·기술·자원·노동’의 분업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충분함.
 - 북한 내 자원·인프라 개발에 대한 중국 독식현상이 강화되는 추세.
 -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어 인프라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중국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
- 북·중 경제 밀착이 곧 대(對)중국 경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중국의 대(對)북한 연계 개발전략의 목적이 북한의 ‘동북 4성화’에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과장된 해석.
 - 중국의 대북 연계 개발전략은 기본적으로 물류 인프라 구축, 자원 및 노동력 확보 등 경제적 동인에 의해 추진. 대북 영향력 확대라는 정치적 목적이 게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북 4성화’라기 보다는 북한변수의 안정적 관리 및 변화 유도에 방점.

**한국과 중국의 대북관계를
‘제로섬 게임’에서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변화시킬 필요성…
북·중경협 확대는 부정적
측면 못지않게 긍정적
측면도 있는바, 부정적
측면을 줄이고 긍정적
측면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북·중경협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중관계의
긴밀화가 관건... 북한
문제에 대해 한·중 간
전략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대북 경제
접근을 조율하는 한편,
공동 경협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할 필요**

- ‘경제 종속은 곧 정치 종속’으로 이해하는 북한이 ‘동북 4성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대(對)중국 경제의존이 심화될수록 한국과의 경협 확대를 통해 균형을 잡으려는 경향도 커질 전망이다.
 - 2009년 북한의 무역의존도(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남·북경협 포함)는 22.7%에 불과한바, ‘경제종속론’은 시기상조.
 -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브라질(18.2%), 미국(18.7%), 일본(22.3%)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상황(2009년 기준).
- 북·중경협 확대 및 남·북경협 위축은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간 현안 해결에서 한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중국이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시키고 대북 경제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우려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전망.
 - 중국의 발언권이 커짐에 따라 한국 주도의 통일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현재 한반도 통일은 ‘남북(南北)주도-미중(美中)보중’ 구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대체적 합의가 존재하나, 향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권익이 커질수록 보다 큰 발언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
-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는 유리하게 작용함.
 - 북·중교역은 북한의 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북·중교역이 확대될수록 북한의 시장도 활성화되는 효과. 반면 남·북경협은 북한 정부기관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확실.
 - 중국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과 본격적 대북경협을 연계시키고 있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
- 한국과 중국의 대북관계를 ‘제로섬 게임’에서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북·중경협 확대는 부정적 측면 못지않게 긍정적 측면도 있는바, 부정적 측면을 줄이고 긍정적 측면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북·중경협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북·중경협을 견제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귀결. 남·북경협을 북·중경협 견제용으로 바라보게 되면, 남·북경협의 건전한 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뿐 아니라, 북한의 대남, 대중 ‘시계추 외교’에 휘말릴 공산이 농후.

- 한·중관계의 긴밀화가 관건임.
 - 북·중경협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중관계의 긴밀화가 관건.
 - 북한문제에 대해 한·중 간 전략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대북 경제접근을 조율하는 한편, 공동 경험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할 필요.

기획 및 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임수호

現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07년 서울대학교에서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1989-2006)」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음. 연구분야는 북한경제, 남북관계, 비확산 등이며, 주요저작으로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미대립』 외 다수가 있음.

주석

- 1) 이하 북중무역, 북한의 대외무역, 남북경협 통계는 각기 KITA 중국무역통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각 년도),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각 월호)을 참조.
- 2) 2009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33.
- 3) 배종렬, “북한의 외자도입 현황과 과제,” 『수은북한경제』(2005년 겨울호), p.46.
- 4) 김상훈, “최근 북중경제협력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10년 8월호), p.78
- 5)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pp.8-9.
- 6)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pp.4-8.
- 7) 배종렬,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수은북한경제』(2010년 여름호), p.5
- 8) 김치관, “북, 라선시에 20억 달러 투자유치 계약 체결,” <통일뉴스>(2011.4.24).
- 9) 배종렬, “북한의 외자도입 현황과 과제,” 『수은북한경제』(2005년 겨울호).

JPI 정책포럼 현황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중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홍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침략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 손기웅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 (2010년 9월)
- 이선진 『중국의 대미안마 전략』 (2010년 9월)
- 최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2010년 9월)
- 전진호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 (2010년 8월)
- 정성장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2010년 8월)
- 최명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2010년 8월)
- 김재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2010년 7월)
- 이성우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2010년 7월)
- 이애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2010년 7월)
- 안병민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 (2010년 6월)
- 서상문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 (2010년 6월)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2010년 6월)
- 권태진 『북한의 식량위기: 배경 및 전망』 (2010년 5월)
- 오경택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2010년 5월)
-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2010년 5월)
- 전성훈 『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함의』 (2010년 4월)

- 김석수 『해적과 해양안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중심으로』 (2010년 4월)
- 유달승 『이란의 권력구도와 정치운동 및 핵 문제』 (2010년 4월)
- 조동호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2010년 3월)
- 이영훈 『북한 경제난의 현황 및 전망』 (2010년 3월)
- 이선진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2010년 3월)
- 문홍호 『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 (2010년 2월)
- 조성렬 『한반도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과 향후 전망』 (2010년 2월)
- 이종서 『EU의 대북정책의 특징: 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 (2010년 1월)
- 박병광 『최근의 중국 군사력 발전 현황과 함의』 (2010년 1월)
- 송화섭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 (2010년 1월)
- 고주현 『ARTE TV 정책형성 과정과 한중일 공동채널의 가능성 모색』 (2009년 12월)
- 김강일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 (2009년 12월)
- 윤이숙 『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2009년 12월)
- 김영희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2009년 12월)
- 박원화 『항공 안전: 국제 및 국내법적 대처』 (2009년 12월)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